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란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ry.or.kr

부실시공 야기, 안전관리 수준 저하 등 건설재해 주원인
건설안전인들 "안전 우선하는 최고가낙찰제 도입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등 폐지 담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추진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

■ 일시: 2012. 8. 13(월) 10: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신관)
 ■ 주최: 국회의원 김희국·나성린 ■ 주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후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재해 다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를 둘러싼 움직임이 또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참고로 '최저가 낙찰제'란 공공부문에서 300억 원 이상(2014년 1월 1일부터 100억 이상으로 확대 예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입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은 분야 최대의 화두였다. 정부가 기존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건설 전 분야가 크게 반대를 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공사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감액을 불러오고, 결국 이것이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이 일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건설업계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후 반년여가 지난 지금 건설업계는 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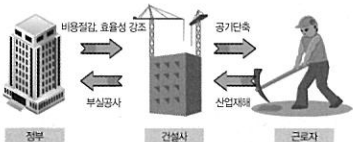
최저가낙찰제, 미숙련 노동력 및 부실자재 투입 조장

확대 유예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건설업계 대다수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제도의 확대적용을 반대한 것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즉 파도가 잠시 수면 위로 가라앉았을 뿐 언젠가는 몰아칠 분위기였던 것이다.

결국 이 참고 있던 목소리는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 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두 의원 외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00여 명의 건설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가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공사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가낙찰제 순환 구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및 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정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위험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낙찰제로 전환해야함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격 위주 최저가낙찰제에서 낙찰자 선정 시 가격과 품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낙찰제(Best Value 등)를 운영하고 있다.

또 주제발표를 맡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도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와 최고가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밖에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방향을 제시한다면 입·낙찰 방법 및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이 선택하고, 적격심사제 등 운찰제의 변별력을 높이며, 가격 중심에서 최고가치 중심의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신 기획재정부 과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개선책이 최고가낙찰제라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고가낙찰제는 목표나 지향이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이 아니다”면서 “하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체한다기보다 적격자 선출, 운찰적 요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등과 논의 거쳐 관련법 개정 추진

한편 김희국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낙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향후 새누리당 내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병석 국회의원

건설은 단순한 토목이 아닙니다. 건설은 예술이고 기적이며, 문화와 혼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로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아닌 안전·기술력 등을 고려한 입찰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노무비 절감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하고, 공사의 유형과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한 입찰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계가 법정관리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적용되면 업계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덤핑입찰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대안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공생’을 했으면 합니다.